

국정 농단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에 매국적 한일군사협정 체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익은 없고, 일본을 위해 우리 주권과 안보,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원천 무효!**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정부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원천 무효!**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천무효!**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은 **원천 무효!**

북한 핵미사일 위협때문에 일본 정보가 필요하다고? 아닙니다! 일본에게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많아!

2009년, 2012년, 2016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때 한국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나 공중조기경보기 피스아이가 **미국, 일본보다 북한 탄도미사일 먼저 탐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 제안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14.4.13)



“(일본 이지스함이나 FFS-5 등의) 레이더가 수평선 아래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하는 것은 사실**”

(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 2016.10.2)

-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이 없는데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 올해 8월3일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일본방향으로 쏘았을 때 한국은 발사(오전 7시53분경) 즉시 파악하였지만 일본은 9시 8분에야 발표하였고 낙하지점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일본이 정찰위성 등 한국에 비해 많은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대북 정보력은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군을 끌어들여 북한을 치겠다는 것!



-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빌미삼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일본군이 북한에 출병하는데 한국 동의는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한국의 뛰어난 대북 정보가 일본에 제공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면 한국은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주고 북일 교전시 일본을 도와주어야 하는 등 민족을 등쳐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대외진출을 부추기는 미국! 전쟁법 시행과 군비증강으로 침략 태세를 갖춘 일본!

2019년 10월 15일 목요일 09:28 중앙

한겨레

황 총리 “부득이하면 일 자위대 입국 가능” 발언 파문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침략과 식민지배 미화!
전쟁법 발효, 시행!
한일 군사협정 체결?
침략준비 끝!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 길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 일본군은 평시에도 미군 함정을 보호한다며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일본군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일본군은 미군 요구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미군의 요구로 일본군이 남한에 출병할 경우 한국이 막을 수 없습니다.
- 일본은 이미 전쟁법을 시행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선제 공격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엠디(MD)와 삼각 동맹 구축 위한 것!



우리가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략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 미국과 일본은 중국 봉쇄를 위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양국이 직접 군사 정보를 공유하면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됩니다.
-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적대하게 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멀어집니다.

권한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내치뿐 아니라 외치도 중단해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넘기는 매국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